흑산공항 건설 여부 오늘 결정 난다

국립공원위원회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재심의 의결
주민 "철새보다 주민 우선" vs 환경단체 "공항 건설 부결해야"

'주민 생존권'이냐, '환경 보전'이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건설 여부가 19일 판가름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옛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주 건물에서 제124차 회의를 열어 흑산공항 신설과 관련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재심의·의결한다. 지난 7월 20일 회의에서 결정을 연기한 뒤 두 달 만에 다시 이뤄지는 심의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25명(당연직 12명, 위촉직 13명)과 특별위원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다. 환경·경제성·안전 등 분야별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주민 의견 청취, 최근 열린 종합토론회 개최 결과가 발표된다.

위원들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여 가결, 보류, 조건부 가결, 부결 등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가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립공원위원회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보류될 수도 있다.

흑산도 주민과 전남도·신안군 등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 환경단체·정의당 등 반대 측 기관·단체는 지난 7월 결정 연기 후에도 치열한 장외 논쟁을 이어갔다.

전남사회단체연합회는 "철새보다 흑산 주민의 생존가치가 최우선"이라며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이들은 "흑산공항 건설지는 흑산도 전체면적 19.7㎢ 중 0.536㎢로 2.7%에 지나지 않다"면서 "특히 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경생태 2등급지 구실잣밤나무 군락지는 이 곳 한 곳뿐만이 아니라 전남에 지천으로 널려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정의당 등은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돼야 한다"며 "십 년을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항 신설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1833억원을 들여 흑산도 68만3000㎡ 부지에 1.2㎞ 길이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가는 데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성공 개최 '운영자 워크숍' 광주시는 18일 고창 힐링카운티에서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 자치구, 조직위 지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과제 운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시 재개발지역 원주민 보호 나서

도시정비사업 종합대책 마련
정비사업 관리시스템 본격 가동

광주시가 재개발지역 원주민 보호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18일 "우선 단기 대책으로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주민갈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조합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도시정비법 요약 해설, 기본적인 법률정보 등을 실어 주민 권익보호에 앞장선다. 광주시는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내에 법률자문기구를 설치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총사업비를 줄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시행자 지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융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세 세입자 보호 대책도 세웠다.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을 해제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뉴딜 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장기 대책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원주민들이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면 정비업체, 조합, 건설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비전' 전 세계 알린다

전남도, 일산 킨텍스 '서밋 아시아'서 홍보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옛 J프로젝트) 미래모습인 '스마트시티 비전'이 선보인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이날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에서 솔라시도의 스마트시티 비전이 공개된다.

솔라시도 스마트시티는 서남해안권 천혜의 관광자원에 친환경에너지, 첨단농업단지, 자율자동차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한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를 지향한다.

지난 2005년 기업도시로 선정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구성지구에 조성된다. 전남도는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시회인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참가를 준비해왔다.

이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등 참여하고 도시로는 코펜하겐, 헬싱키, 바르셀로나, 포르투, 세종, 부산 등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 솔라시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조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최적지임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전시관은 국내 도시관 중 최대 규모다. 인공태양 조형물, 미러룸 등 특색 있는 전시물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솔라시도 스마트시티의 미래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치됐다.

백지상태 신도시라는 장점을 기반으로 스마트관광, 스마트팜, 태양광발전, 마이크로그리드, 자율자동차 등의 미래기술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사람 중심 미래도시를 전남형 스마트시티 솔라시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양수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솔라시도가 차별화된 콘셉트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에도 역량과 지혜를 모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균형발전협 공동회장 선출

김영록(사진) 전남지사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제5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국회의원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 박명재(경북 포항) 의원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006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전남지역에서는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방분권, 재정격차 완화,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등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의체 회원들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돼 민선 7기 핵심 의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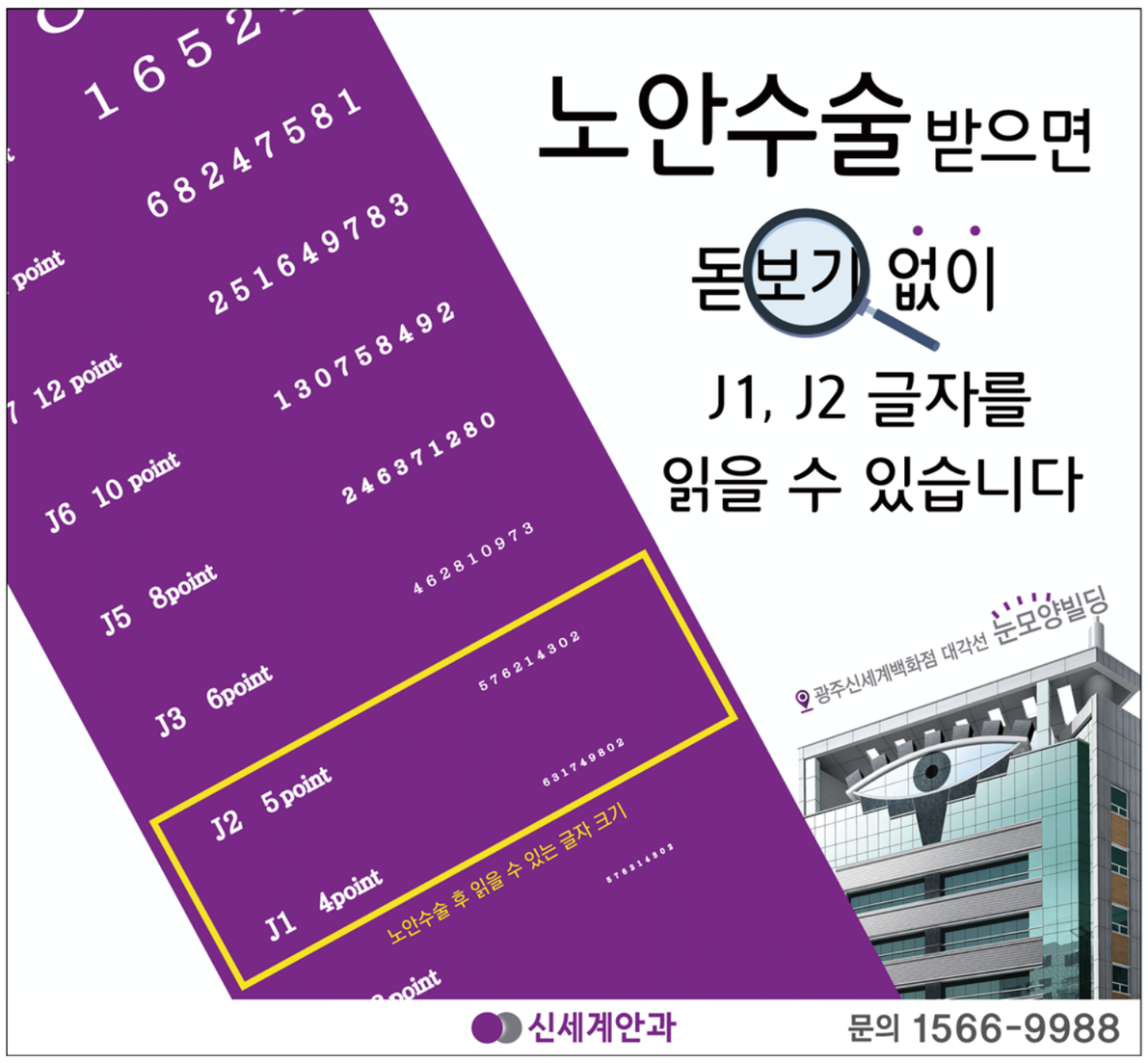
/박정욱 기자 jwpark@

광주·부산 공동 발전방안 모색 도시포럼

광주시는 오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함께 광주·부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미래발전 과제를 발굴하는 공동 도시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남해안의 중추도시인 부산시와 광주시의 연계를 통한 역할 모색 및 지역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정부의 '204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건의할 사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이명규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 지회장)가 ▲남해안 경제벨트를 중국, 일본과 연결하는 한중일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방안 ▲수도권 비대화 문제 대안으로 비수도권 대도시인 부산, 광주시 등 지역중심기능 회복 필요 ▲남해안 경제벨트에서 광주시로 연결되는 도로 및 고속철도 개설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광주시 교육, 문화, 금융, 의료 등 중심지화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 발전 추구 ▲스마트시티로의 변모 추진 등을 제시 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